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월 총파업 확정! 현대·기아차지부도 4월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박근혜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 결정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4월 총파업 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왜 4월 “선제 파업”인가?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악을 통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공공연히 선전포고를 한 박근혜에 맞서, 공격이 관철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국회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하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뒤 한상균 집행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4월 총파업을 호소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이 통과됐다.

“선제 파업”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사태에 끌려가는 파업 계획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때 당시 경찰이 공장을 에워쌌는데도 ‘아직 침탈은 아니다’며 연대파업을 계속 미뤘다. 2013년 말 박근혜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 때도 이듬해 2월 25일 뒤늦은 파업 조

직으로 김이 빠졌다. 이런 계획은 점점 더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 중순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갑끌기와 이를 통한 김빠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4월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기층 활동가들이 총파업 조직을 위해 나서자

총파업이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박근혜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 대오인 현대·기아차지부의 참여가 4월 총파업 성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 조직된 대규모 노조가 나선다면, 총파업의 경제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파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져

이후 부문별로 투쟁이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리 노조는 덩치가 크니까’, ‘단협으로 지키면 되지’ 하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박근혜는 대기업 노조를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아무리 덩치 큰 노조도 고립돼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걸고 선두에서 싸워야 대형 노조들도 지지를 받으며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기층에서 활동가들이 실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역-현장 단위의 ‘총파업 승리 실천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여기에 적극 참가해, 3월 말로 예정된 총투표에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총파업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민주노총 선거에서 현대·기아차의 다수 조합원이 박근혜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한상균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제 한상균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은 누구보다 적극 민주노총 지도부가 소명한 파업에 응해야 한다.

박근혜는 악랄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다. 지지율이 고꾸라지며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의 오른팔 김기춘이 사임했다.

우리는 박근혜 취임 이후 최고로 싸우기 좋고 유리한 때를 맞고 있다. 이럴 때 기세 좋게 총파업에 나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 각개격파 시도에 단결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면전 선포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공격 등 박근혜의 파상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정부가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을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된다. 각개격파 당해 힘이 약화되기 전에 함께 싸워야 한다.

“단결”, “연대”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노동자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와 정몽구 – 임금체계 개악 추진 한통속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별로 공격을 밀어붙여,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각개약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 방침에 반대해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최근 현대·기아차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피력한 것도 정부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

성과급제 공격은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다. 또

1987년에 공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만든 임금체계를 분쇄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단결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성과급을 위한 인사고과는 해고요건 완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1998년 현대차 정리하고 때도 사측은 인사고과를 들이밀며 해고를 압박했다. 따라서 성과급제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측은 공격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독일처럼 우선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는 이중임금제를 먼저 도입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의 저임금을 용납해선 안 된다. 낮은 임금층 형성은

기존 사원들의 임금 하락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 지엠에서도 이중임금제 도입 이후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에 내몰렸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데 핵심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잦다. 통상임금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럴 때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 이런 투쟁은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박근혜의 파견 확대 정책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비정규직 확대 막자

박근혜는 파견 확대를 원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합법적 사내하청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대차에서 2천 명 이상 늘어난 축탁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같다.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할 수 있다.

지금 현대·기아차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총파업 동참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3월 말~4월 초 파업

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아랑곳 않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사측에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8·18 신규채용 합의’ 폐기와 정규직 전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총파업 건설 과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즉, 공무원·교사 등 해당 부문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직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함께 걸고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일단,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

는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노후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수술하려 한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단협 개악 등 공공부문 공격을 우선 성공시켜서 이를 민간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민간 기업주

들도 그에 힘입어 우리를 쥐어짜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의 집중포화가 우선 쏟아질 그곳에 함께 힘을 모아 반노동 공세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민간부문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을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